

소각장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분석

김중기, 박창희,* 정재춘,** 이성택,*** 허 석****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경기도 환경전문위원
**연세대학교 환경학과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과학과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Analysis of Citizen's Attitude to the Incineration

Joong-Kee Kim, Chang-Hee Park,* Jae-Chun Chung**
Sung-Taik Lee,*** Seok Heo****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Suwon University
*Environmental Office, Kyonggi provinc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ABSTRACT

A questionnaire surve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itizen's attitude concerning the waste incineration facility. People disliked most crematorium followed by waste transfer station, chemical factory, waste incineration facility and sanitary landfill. Most people favored 1km minimum distance of incineration facilities from the residence.

Most people think that we need most composting facilities in the future followed by sanitary landfill and incineration facilities. Majority of people was willing to accept the perfect incineration facilities near their residence. However, 37.6% answered no. Most people accepted compulsory measures by the government in the location of incineration facilities.

One incineration facility per one city or Gun was slightly favored than multi-city or Gun incineration facility. People think that perfect technology most important to overcome Nimby's.

Key words : Incineration facility, Composting facility, Citizen's attitude, Nimby

초 록

소각장에 대한 주민위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설은 시체 화장시설, 쓰레기 적환장, 화학공장, 쓰레기 소각장, 위생매립지의 순이었다. 주거지역과 소각장까지의 최소 이격거리를 묻는 질문에는 1km 이상이 가장 많았고, 2km 이상이 그 다음이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시설에는 퇴비화 시설, 위생매립지, 소각장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완벽한 소각시설이 부득이 집 근처에 설치될때의 수용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허용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37.6%가 수용불가에 응답하였다.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과 같은 사업 추진시 행정기관의 강압적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동감한다는 대답이 과반수를 넘었다. 주민들은 광역소각장 보다 1시·군 1소각장에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지역이기주의의 극복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완벽한 기술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이 행정의 민주화·공개화였다.

핵심말말 : 소각장, 주민의식, 광역 소각장, 지역이기주의

1. 서 론

최근 들어 소각장 시설의 건설이 늘고 있다. 이것은 정부에서 2001년까지 소각목표율을 25%로 설정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환경부, 1996), 지방자치단체들도 매립지난을 덜기위해 소각시설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인 소각시설도 이른바 님비현상 때문에 입지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간에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김종후 등, 1994). 이리하여 얼마전에는 이러한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공여지책의 하나로서 어쩔수 없이 서울에서는 1구 1소각장, 지방에서는 1시·군 1소각장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님비현상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흥천댐 건설 반대운동(1990), 동양화학 TDI 군산공장 반대운동(1989), 울진, 안면도

해폐기물 처분장 반대운동(1990),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가동 중단운동(1990), 김포 수도권매립지 반대운동(1991), 목동 소각장, 상계 자원회수시설 반대운동(1993) 등을 들 수 있다(김학명, 1993). 최근에는 군포 소각장 반대운동(1995)이 거세게 일어나 사회의 커다란 물의를 빚은 일도 있었다(김성훈, 1995).

이러한 님비현상은 고도의 정치적인 해결을 요하는 복잡한 문제이며(Petts, 1993),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소각장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분석하여 님비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연구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소각장에 대한 주민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6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경기

도 31개 시·군 주민 9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인원수는 각 시·군 별로 인구비례에 의해서 추출하였다.

표 1에 응답자의 특성을 보였다.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 40대, 50대, 10대의 순이었으며, 직업별로는 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41.3%로 가장 많았고, 주부, 학생, 기타가 35%였으며, 회사원, 공무원, 교사가 전체 응답자의 17.7%였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59.0%, 대졸이상이 30.3%, 중졸, 국졸 순이었다. 거주년도별로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39.0%로 가장 많았으며 5~10년, 1~3년, 4~5년, 1년이내의 순이었다.

표 1. 응답자의 특성

연령	10대 : 1.6%
	20대 : 33.6%
	30대 : 41.8%
	40대 : 17.2%
	50대 : 5.8%
직업	회사원, 공무원, 교사 : 19.2%
	의사, 변호사, 교수 : 1.5%
	제조업, 건설업 : 3.6%
	상업, 서비스업 : 34.1%
	주부, 학생, 기타 : 41.1%
학력	국졸 : 2.5%
	중졸 : 7.5%
	고졸 : 59.7%
	대졸이상 : 26.8%
	기타 : 0.5%
거주년도	1년 이내 : 14.0%
	1~3년 : 20.0%
	3~5년 : 17.5%
	5~10년 : 20.8%
	10년 이상 : 27.6%

3. 결과 및 고찰

3.1 가장 반대하는 시설

지역주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어느 것을 제

일 반대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5.7%가 화학공장을 답해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5.3%가 쓰레기 적환장을 답했으며 21%의 병원 시체 화장시설, 9%의 쓰레기 소각장, 6.3%의 매립지, 4.3%의 하수종말 처리장의 순이었다.

시·군별로 차이점을 보면 시 지역에서는 28%의 병원 시체 화장시설, 21.5%의 화학공장, 17.9%의 쓰레기 적환장의 순이었으며, 군 지역에서는 화학공장과 쓰레기 적환장이 각각 25.7%와 25.3%로 비슷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21%의 병원시체 화장시설의 순이었다.

표 2. 제일 반대하는 시설

구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쓰레기 소각장	80	8.6
위생 매립지	46	5.0
쓰레기 적환장	189	25.3
화학공장	221	23.8
병원 시체 화장시설	241	25.9
하수종말 처리장	29	3.1
무응답	123	13.2

3.2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의견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된다고 한다면의 질문에는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철저히 시설관리를 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4.4%로 가장 많았고 절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22.2%였으며 납득할만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면 반대하지 않는다가 9%, 지역쓰레기 처리를 위해 피해를 감수

표 3.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쓰레기 처리위해 피해감수	27	2.9
철저한 관리시설 조건으로 찬성	598	64.4
절대반대	206	22.2
경제적보상 조건으로 찬성	84	9.0
기타	7	1.0
무응답	7	1.0

한다는 의견이 2.9%의 순이었다.

3.3 소각장과 매립지 설치에 적합한 장소

쓰레기 소각장과 위생매립지를 설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묻는 질문에 공단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32%가 답했으며, 31.1%의 응답자가 새로히 개발되는 지역에 같이 설치해야 한다는 답했고, 농지를 택한 응답자가 11.7%, 공원이나 녹지를 택한 응답자가 10%, 소수의 의견으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이 있었다.

표 4.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지 설치에 적합한 장소

구 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주거지역	31	3.3
공원이나 녹지	93	10.0
공단이나 공업지역	297	32.0
농 지	109	11.7
상업지역	12	1.3
새로히 개발되는 지역	289	31.1
기 타	76	8.2
무응답	22	2.4

3.4 소각장 설치를 위한 정부의 태도

소각장 설치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69.3%가 전역에 시설의 안전설치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주민과 협의가 안되면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14%,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쓰레기 처리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7.5%의 순이었으며, 소수의 의견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강제라도 설치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시·군별 차이점을 보면, 시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응답자가 안전설치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한 반면(70.8%:65%), 군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응답자가 주민과 협의전에는 설치하지 말아야한다고 응답하였다(19%:11.7%).

3.5 처리시설의 예산확보 방법

표 5. 소각장 설치를 위한 정부의 태도

구 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강제라도 설치해야 함	52	5.6
주민과 협의 전에는 설치하지 말아야 함	130	14.0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처리 안해줌	70	7.5
안전설치 위한 새로운 방안 강구	644	69.3
기 타	18	1.9
무응답	15	1.6

노천소각과 재래식 매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마련의 적절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64.7%가 불법처리의 규제와 벌금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답했으며, 15.2%는 자금의 예산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쓰레기 수거비용 인상과 별도의 세금징수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응답자들의 대답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들의 부담에는 매우 인색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노천소각과 재래식 매립을 개선하기 위한 처리 시설 설치의 예산확보 방법

구 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별도의 세금을 더 낸다	47	5.1
쓰레기 수거비용 인상	100	10.8
불법처리 규제와 벌금부과	601	64.7
자금예산으로 설치	141	15.2
기 타	21	2.3
무응답	19	2.0

3.6 주거지역과 소각장과의 거리

주거지역과 소각장까지의 최소이격거리를 묻는 질문에 1km 이상에 답한 응답자가 36.2%로 가장 많았고, 2km 이상이 33.3%, 800m 이상, 500m 이상의 순이었다. 여기에서는 거의 70%에 달하는 사람이 최소이격거리를 1km 이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1km 이하에는 30%만이 답했다.

이러한 경향에는 시·군별 차이가 별로 없었다.

표 7. 주거지역과 소각장과의 최소이격거리

구 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500 m 이상	133	14.3
800 m 이상	273	29.6
1 km 이상	363	36.2
2 km 이상	309	33.3
무응답	9	1.0

3.7 쓰레기 처리를 위해 더 많이 필요한 시설

쓰레기 처리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시설에 관한 질문에서 39.1%가 퇴비화 시설을 택했고, 위생매립지와 소각장이 각각 29.9%와 29.4%로 나타났다.

시·군별 차이를 보면, 시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응답자가 소각장을 더 필요한 시설이라고 응답한 반면(30.1%:26.7%), 군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응답자가 위생매립장을 보다 더 필요한 시설로 보았다(35%:28%).

표 8. 쓰레기 처리를 위해 더 많이 필요한 시설

구 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위생매립장	278	29.9
소각장	273	29.4
퇴비화 시설	363	39.1
무응답	15	1.6

3.8 집근처에서 설치를 가장 반대하는 시설

집 근처에 설치를 가장 반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분뇨 처리장이 54.7%로 제일 많았으며, 27.1%의 쓰레기 매립장, 10.9%의 쓰레기 소각장, 3.2%의 퇴비화 시설 순이었다. 시·군별 차이를 보면, 시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응답자가 분뇨처리장을 가장 싫어한 반면(57.9%:45.3%), 군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응답자가 쓰레기 매립장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24.2%).

3.9 완벽한 소각시설에 대한 의견

완벽한 소각시설이 부득이 집 근처에 설치될 때

표 9. 집 근처에서 설치를 가장 반대하는 시설

구 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쓰레기 매립장	252	27.1
쓰레기 소각장	101	10.9
퇴비화 시설	30	3.2
분뇨 처리장	508	54.7
무응답	38	4.1

의 수용의견을 묻는 질문에 허용하겠다는 응답이 54.8%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37.6%의 수용불가가 그 다음이었고, 관심없다는 의견이 7%였다.

시·군별 차이를 보면 시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응답자가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55.1%:49.7%), 군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응답자가 허용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41.7%:37.9%).

표 10. 완벽한 소각시설이 집 근처에 세워진다면

구 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허용하겠다	509	54.8
허용안하겠다	349	37.6
관심없다	65	7.0
무응답	6	0.6

3.10 행정기관의 강압적인 조치에 대한 의견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과 같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강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동감한다가 44.8%, 적극 동감한다가 6.8%로 긍정적인 반응이 과반수를 약간 상회했으며, 반대한다가 26.4%, 적극 반대한다가 8.9%로 부정적인 반응이

표 11.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과 같은 사업에서의 행정기관의 강압적인 조치에 대한 의견

구 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적극 동감한다	63	6.8
동감한다	417	44.9
반대한다	245	26.4
적극 반대한다	83	8.9
잘 모르겠다	115	12.4
무응답	6	0.6

35% 정도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12.4%나 있었다.

3. 11 지역 쓰레기 행정의 개선점

지역의 쓰레기 처리 행정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재활용 시책의 강화가 45.4%, 쓰레기의 신속수거가 29.6%, 소각장 설치 8.2%, 매립지의 충분한 확보, 수거비용의 인하 순이었다.

표 12. 지역 쓰레기 행정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점

구 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쓰레기의 신속수거	275	29.6
충분한 매립지 확보	66	7.1
소각장 설치	76	8.2
재활용 시책 강화	422	45.4
쓰레기 수거비용 인하	56	6.0
무응답	34	3.7

3. 12 소각장 건설 계획 반대의 근거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 반대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운영과정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56.3%, 주민의견 수렴무시가 13.3%, 건설과정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9.6%, 지역개발 제한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 전량소각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재활용 정책의 후퇴 순이었다.

표 13.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 반대의 근거

구 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운영과정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523	56.3
건설과정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89	9.6
전량소각으로 인한 자원 낭비, 재활용 정책 후퇴	79	8.5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재산피해	83	8.9
주민의견 수렴절차 무시	124	13.3
무응답	31	3.3

3. 13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묻는 질문에 소각장의 유해물질, 악취, 검댕이 42%,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가 31.2%, 운반차량의 소음, 먼지, 악취, 교통체증이 15.6%, 건설공사장의 소음, 먼지, 진동이 2.8%, 자연경관의 훼손 1.9%의 순이었다. 이것을 보면 운영과정의 대기오염 배출물에 대한 응답이 약 60%, 수질오염 배출물에 대한 응답이 31.2% 등이었다.

표 14.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중 가장 중요한 문제

구 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건설공사장의 소음, 먼지, 진동	26	2.8
소각장의 유해물질, 악취, 검댕	390	42.0
운반차량의 소음, 먼지, 악취, 교통체증	145	15.6
경관훼손	18	1.9
수질오염, 자연 생태계 파괴, 기타 환경오염	290	31.2
무응답	66	6.5

3. 14 쓰레기 처리에 바람직한 방법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는 재활용:소각:매립에 대한 비율을 7:2:1로 해야한다는 응답이 48.7%, 5:3:2에 29.8%, 3:4:3이 10.4%였으며, 소수의 의견으로는 전량 재활용 해야 한다와 1:5:4의 비율로 해야 한다 등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었다.

표 15. 쓰레기 처리방법 (재활용:소각:매립)

구 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재활용 100%	88	9.5
70%: 20%: 10%	452	48.7
50%: 30%: 20%	277	29.8
30%: 40%: 30%	97	10.4
10%: 50%: 40%	11	1.2
무응답	4	0.4

3. 15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의견

소각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쓰레기 처리를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시설이다에 69.3%, 쓰레기 처리에 좋은 방법이다에 15.4%로 긍정적인 반응이 거의 85%에 달했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혐오시설이다에 9.9%가 응답했다.

표 16.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의견

구 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좋은방법이다	143	15.4
혐오시설이다	92	9.9
어쩔수 없이 선택해야하는 시설이다	644	69.3
잘 모르겠다	43	4.6
무응답	4	0.7

3. 16 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에 대한 의견

자가지역 쓰레기를 타지역에서 처리시 타지역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해 오물수거 비용을 인상한다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41%가 인상 세금액수와 보상액수에 따라 정하겠다는데 응답했으며, 29.7%가 찬성한다는 데 대해 약 70%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찬성하지 못한다는 데 25.6%가 답했다.

표 17. 자가지역 쓰레기를 타지역에서 처리시 타지역 주민에 보상금 지급을 위해 오물처리 처리비용 인상에 대한 의견

구 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찬성한다	276	29.7
반대한다	238	25.6
인상된 세금의 액수와 보상액수에 따라 정하겠다	381	41.0
관심없다	30	3.2
무응답	4	0.4

3. 17 보상금 및 면세혜택에 대한 의견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해 정부에서 정기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면세혜택을 부여한다면 설

치를 찬성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40.3%가 보상금 액수와 면세혜택에 따라 정하겠다는 데 답했으며, 찬성한다는 데 23.7%가 응답하여 적절한 보상과 면세혜택이 주어진다면 약 65%정도가 찬성했고 찬성하지 못한다는 데 30.4%가 응답했으며, 관심없다는 데 5%가 응답했다.

시·군별 차이를 보면, 시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하였고(24.9%:17.7%), 군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응답자가 찬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37.3%:27.9%).

표 18.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해 정부에서 정기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면세혜택을 준다면 찬성하겠는가?

구 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찬성한다	220	23.7
찬성하지 못한다	282	25.6
보상금 액수와 면세혜택의 정도에 따라 정하겠다	374	40.3
관심없다	46	5.0
무응답	7	0.8

3. 18 대화와 타협에 대한 의견

소각장 건설문제를 가지고 주민대표와 관계당국 대표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한다면 이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47.1%,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29.3%, 반드시 성공한다는 데 3.2%, 반드시 실패한다는 데 2.6%로 응답해 공동대책위

표 19. 소각장 건설문제를 가지고 주민대표와 관계당국 대표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구 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24	2.6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272	29.3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438	47.1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30	3.2
잘 모르겠다	160	17.5
무응답	2	0.2

원회구성에 대해 반신반의 하는 실정이다.

3. 19 시위와 농성의 효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계당국의 소각장 건설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집단시위나 농성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노력과 희생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데 45.5%, 한두번은 효과가 있다에 28.8%, 할때마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에 8.3%, 전혀 효과가 없다에 3.4%로 답해 전체적으로는 효과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계당국의 소각장 건설 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시위나 농성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구 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할 때마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	77	8.3
한두번은 효과가 있다	268	28.8
노력과 희생에 비해 효과는 적은 편이다	423	45.5
전혀 효과가 없다	32	3.4
잘 모르겠다	125	13.5
무응답	4	0.4

3. 20 주민의 요구사항 반영 방법

소각로 건설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계당국의 건설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공동대책 위원회 구성 43.3%, 공청회·토론회 개최에 36.5%, 진정서·청원서·탄원서에 9%, 시위·농성에 6%, 소송과 정치적 압력에 3.1% 등의 순이었다.

표 21. 소각로 건설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계당국 건설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방법

구 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시위, 농성	56	6.0
진정서, 탄원서	73	7.9
공청회, 토론회	339	36.5
소송, 정치적 압력	29	3.1
공동대책위원회	402	43.3
무응답	30	3.2

3. 21 광역 소각장 선호도

광역 쓰레기 소각장과 1시·군 1소각장 설립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1시·군 1소각장에 51%, 광역 소각장에 46.9%로 1시·군 1소각장에 대해 약간의 선호도를 더 나타냈다.

시·군별 차이를 보면, 시지역의 응답자가 보다 더 광역 소각장을 선호하였다(54.6%:45%).

표 22. 광역 쓰레기 소각장과 1시·군 1소각장 설립에 대한 선호도

구 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광역 소각장	474	51.0
1시·군 1소각장	436	46.9
무응답	19	2.0

3. 22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에 대한 질문에서는 완벽한 기술에 52.7%, 행정의 민주화, 공개화에 36%, 적절한 보상에 8.2%로 보상보다는 행정정책과 처리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

구 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행정의 민주화, 공개화	334	36.0
적절한 보상	76	8.2
완벽한 기술	490	52.7
무응답	29	3.1

4. 요약 및 결론

소각장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주민들이 가장 반대하는 시설은 시체화장시설, 쓰레기 적환장, 화학공장, 위생 매립지의 순이었다.
- (2) 소각장 설치를 위한 정부의 태도를 묻는 질

문에서는 안전한 설치를 위하여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주민과 협의 전에는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두번째였다. 처리시설의 예산확보 방법에 있어서는 불법처리 규제와 벌금 부과금으로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3) 주거지역과 소각장까지의 최소 이격거리를 묻는 질문에서는 1 km 이상이 가장 많았고, 2 km 이상이 그 다음이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시설에 관한 질문에서는 퇴비화 시설, 위생매립지, 소각장의 순이었다.
- (4) 완벽한 소각시설이 부득이 집 근처에 설치될때의 수용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허용하겠다는 대답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37.6%가 수용불가라고 대답하였다.
- (5)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과 같은 사업 추진시 행정기관의 강압적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동감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 (6) 쓰레기 처리의 바람직한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재활용:소각:매립을 7:2:1로 해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소각장 건설계획에 있어서 시위나 농성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노력과 희생에 비해 효과가 적은 편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 (7) 광역쓰레기 소각장과 1시·군 1소각장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1시·군 1소각장이 광역소각장보다도 약간 우세한 비율을 보였다. 지역이기주의의 극복방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완벽한 기술을 그 해답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이 행정의 민주화·공개화였다.

참고 문헌

1. 김정훈, 1995,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 선정과 시민참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pp. 1-21
2. 김종후, 전영원, 강동희, 1994,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집단 이해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 연구 제6권 제1호 pp.59-86
3. 김학명, 1993,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활성화를 위한 님비(NIMBY) 현상 해결연구, 주식회사 콘테크, 환경정책자료 제5호
4. 환경부, 1996,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5. Petts, J, 1993, Stress and public concern over hazardous waste. In Rose, J.(ed). Human stress and the environment. Gordon and Breach, London.